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사 건 명 17-학인-00031 자치활동의 권리 침해 등  
신 청 인 ○ ○ ○  
피 해 자 ○ ○ ○ (前, ○ ○ ○ ○ 고등학교 ○ 학년 ○ 반 학생)  
피 신 청 인 1. ○ ○ ○ (○ ○ ○ ○ 고등학교 ○ 학년 ○ 반 담임교사)  
2. ○ ○ ○ (○ ○ ○ ○ 고등학교 ○ 학년 부장교사)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교육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다. 피신청인들이 피해자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제한하여, 피해자는 학교 자퇴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학습권 및 자기운명결정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생인권을 제한할 때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사례 전파 등)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다. 전라북도내 타 학교 학교규정에 대해 점검하여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 ○ ○ ○ 고등학교장에게

가. 위와 같은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과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및 학생자치활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정하는 강사에게 2회 이상) 및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붙임 3] 과 같다.

##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5. 7. 12.(수)

나. 신 청 인 : ○○○ (피해자의 母)

다. 피 해 자 : ○○○ (前, ○○○고등학교 ○학년 ○반 학생)

라. 피신청인 : 1. ○○○(○학년 ○반 담임교사)

2. ○○○(○학년 부장교사)

마. 신청요지

- 피해자는 2017년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였는데, 학생회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 서류에 피신청인들이 서명을 하지 않아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퇴를 하였다.

## 2. 관련규정

[붙임 4] 와 같다.

## 3.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붙임 1] 과 같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붙임 2] 와 같다.

다. ○○○고등학교 생활규정

##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피신청인들과 신청인의 주장, 관련 서류(학교생활규정 등)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7학년도 2학기~2018학년도 1학기까지 해당 학교 학생회장 선거를 위해 2017. 6. 22.(목)에 공고를 하였으며, 입후보 등록기간(2017. 6. 26.~ 6. 30. 16:30까지), 입후보자 공고(2017. 7. 10.), 학견 발표(2017. 7. 17. 6교시), 투표일시(2017. 7. 17. 7교시)가 나타나고 있으며, 입후보자 자격요건으로 “①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중인 학생 ②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되어 있다.

2) ○○○고등학교 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52조(입후보자 등록)에서는 정·부회장 등록 서류로 후보자 등록 원서(담임 추천서, 학부모 동의서), 학년부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사와 재학생 100인 이상의 서명 추천을 받은 추천서(단, 재학생이 2인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자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3) 2017년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한 피해자의 학생회장 입후보 등록서류에 피신청인 1., 2.는 서명을 거부하였다.

4) 피해자는 2017년 학생회장 선거에 등록(등록기간 2017. 6. 26.~ 6. 30. 16:30까지)을 하지 못하였다.

5) 피해자는 2017년 학생회장 선거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7. 7. 4.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11. 즉시자퇴원을 제출하여 자퇴처리가 되었다.

## 나. 판단

### 1) 자치활동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는 평등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제1항은 아동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는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항에서는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고 규정하

고, 제3항에서는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규정 제15조(자치활동) 제1항에서는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1)항과 같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장 선거를 위해 공고를 하였으며, 위 인정사실 2)항과 같이 학생회장 입후보를 위한 등록 서류로는 ① 학생회장 입후보 등록원서(학부모 동의서, 담임추천서), ② 학년부장을 포함한 3인 교사 추천서, ③ 재학생 100인 이상의 서명 추천을 받은 추천서(단, 재학생이 2인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자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를 구비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의 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등록서류 및 학생회 관련 생활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생활규정 제45조 제2항에서는 “임원자격으로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 및 차장은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라는 표현은 상당히 자의적이며 이에 대해 누가 평가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

다.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선출된 학생회장은 자신의 공약 등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임원)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학생회장과 집행부에 대해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지 못하다고 누군가(학교장 또는 교사) 판단한다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치활동을 보장하는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생활규정 제15조에서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같이, 학생회장은 ○○○○고등학교 학생 중 학생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충분하고, 학생회 집행부(임원)는 학생회장이 선발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활규정 제45조 제1항에서는 학생회장에 대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 “승인”이 허용된다면, “불승인”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승인”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을 받아 학생회장에 취임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생회장 선거를 위해 등록하기 위한 서류로 학부모 동의서, 담임교사 추천서가 필수서류인데, 학생이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서 학부모의 동의와 담임교사의 추천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 학부모의 동의와 담임교사의 추천이 필요한 이유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해당 학생이 학생회장에 출마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의 동의 서명과 담임교사의 추천 서명은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학생은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학생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는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라, 누군가의 허가를 득해야하는 ‘허가제’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 동의서 및 담임교사 추천서는 학생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선거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고, 학생의 출마 사실을 알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면 학부모, 담임교사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등록 서류로 학년부장 교사를 포함한 3인의 교사의 추천서가 있는데,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투표권이 없는 교사의 추천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더구나, 학년부장 교사의 추천이 왜 필수여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타 교사들이 추천을 하였는데, 학년부장 교사 1인이 추천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학생은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학생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출마를 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이 되어야 하는 선거가 사실상 학년부장 교사에 의한 ‘허가제’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추천서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자치활동의 권리 침해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담임교사(피신청인 1.), 학년부장 교사(피신청인 2.)는 피해자의 학생회장 등록서류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여, 위 인정사실 4)항과 같이 피해자는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1.은 피해자가 '2학년 학교 생활 중 보충수업에 무단으로 빠지고, 출석부를 조작, 폐기, 은폐하는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자'였고, '추천서 작성 마감 30분 전에 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어서 추천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조사자 2.는 '피조사자 1.로부터 교과 방과후 수업에 무단으로 빠지고 와서 출석부에 본인이 참여한 것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학급 자체적으로 규칙(2학기 전까지 학교 관련 각종 행사에 이번 일에 관련된 학생들은 추천 및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 포함)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숙하는 기간 동안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에 추천을 해주겠다.'고 하고 추천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조사자 1., 2.는 해당 추천서가 교사의 재량으로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재량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의 행위(보충수업 출석부 조작)를 이유로 추천을 거부하였다는 피조사자 1.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해당 반은 34명의 학생 중 29명의 학생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는 정당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반의 출석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는 것으로 보았을 때, 보충수업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이었고,

이는 보충수업을 강제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도 볼 수 있어, 이를 고려하여 생활교육(지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직접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례 제18조 제3항 '성적·징계를 받은 사실로 학생 자치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추천서 작성 30분 전에 와서 써달라고 요구하는 자세'를 이유로 피조사자 1.은 추천을 거부하였다고 하였는데, 먼저 담임교사로서 피해자가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전 30분이었다는 이유로 추천서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담임교사에게 해당 반의 상황에 대해 전해들은 피조사자 2.는 이를 이유로 '담임교사가 추천하면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담임추천서와 교사 추천서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담임교사의 사유를 이유로 작성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추천서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의 재량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적인 추천서는 작성자의 재량 및 자율의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 판단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추천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학생회장에 출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생활규정 제15조(자치활동) 제1항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장교사가 허가하지 않으면 학생회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허가제 선거를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회 선거 추천서류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장 교사의 재량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교 2017년 학생회장 선거 입후보를 하기 위한 피해자의 입후보 등록서류에 피신청인 1., 2.는 추천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피해자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은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자는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피해자는 학생회 선거를 준비했던 동료학생들, 추천인들 등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정도의 모멸감, 수치심, 분노, 의욕 및 사기저하 등)에 이르렀다. 이는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므로 피해자의 학습권 및 자기운명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소결

위와 같은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학생들의 인권보장 보다 교사가 언제든지 임의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들은 피해자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제한하였지만, 피해자가 학교 자퇴를 결정하기에 이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습권 및 자기운명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 이는 피신청인들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한하면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학생 인권을 제한할 때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각급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학생 생활지도시 인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학생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8.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오 동 선 (인)

## [붙임 1]

### 신청인 주장

#### 1. 피해학생 학부모(母), 피해학생 면담 내용

-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가 2017. 7. 14.(금)에 있는데,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6월 중순경부터 입후보 서류를 받아 준비를 하고 있었다.

- 학교에서는 입후보를 하기 위한 서류 중에 학생 100명의 추천 서명과 더불어 학년부장(필수)과 교사 2명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다.

- 6. 23.(금)경 학생회장 선거 준비를 하면서 학생 50명의 서명을 일단 먼저 받고, 학년부장 교사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갔는데 “너는 맨날 잠도 자고, 학습태도 때문에 해주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종례시간에 학년부장 선생님을 다시 만나러 갔는데 담임교사가 쳐다보면서 “왜 왔어” 라고 물었고, 학년부장은 다음 주에 오라고 하였다.

- 6. 26.(월) 담임교사가 2학년 3반에 와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면서, 교신팀과 시청각신팀으로 학생들을 나누고 설문 작성을 하도록 하였고, 설문의 내용은 보충수업을 하는가?, 보충수업을 빼면 어디에 있는가?, 보충수업 조작한 사람을 쓰도록 하는 등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 설문에서 보충수업을 조작한 다른 학생들을 쓰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모든 시상 제외, 모든 출마 제외, 장학금 제외 시키겠다고 하고, 생기부에 사기꾼이라고 적겠다. 학부모를 소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출마를 못하게 되는 줄 알고 낙담을 하였다.

- 6. 29.(목) 정도에 자율시간에 담임교사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시험 오답노트를 몇 일까지 써오라고 하고 안 해온 애들은

사람으로 안본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여름 방학 중에 5시간 봉사하기, 8월까지 별점을 0점으로 만들기, 앞으로 보충을 빼먹지 말기를 하도록 했다.

- 담임교사의 말을 듣고 일이 무마가 된 줄 알았고, 다시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입후보 학생이 “너 나갈 거야 말 거야 내일까지 서류 내야 돼”라고 말을 해서,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다시 50명의 학생들에게 추천 서명을 받았다. 선생님들에게도 싸인을 받으러 가서 ○○○ 선생님과 ○○○ 선생님에게 싸인을 받았다.

- 6. 30(금)이 됐고, 다시 학년부장 교사에게 서명을 받으러 가기가 너무 무서웠는데, 용기를 내서 점심시간 경에 교무실로 학년부장을 찾아가서 싸인을 해달라고 했고, 학년부장 교사와 교무실 밖 복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년부장 교사는 “선생님이 담임선생님하고 한 말이 있어서 못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너는 퇴학감이야, 아무튼 너는 퇴학감이야” 등의 말을 하였는데, 다시 “담임선생님 허락 있으면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담임교사의 허락을 맡으려고, 담임교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보여서, 교실로 돌아갔다가, 6교시 이후 쉬는 시간에 담임교사를 찾아가서 “학생회장 나가는 거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담임교사는 “너희들이 잘못된 거는 아냐?”, “반에서 누가 나가도 반대했을 것이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등의 말을 하여, 눈물이 나오는 것을 꼭 참고, 교무실 담임교사 옆에서 7교시 종이 칠 때까지 있었다.

- 7교시 이후 청소시간이 되었고, 그 때 시간이 오후 4시였고 30분 뒤가 입후보 서류 마감시간이어서 애태우면서 “나 이거 안하면 정말 후회할 거 같다”라고 말하자 반의 다른 학생들이 “어차피 안해줄 건데 그래도 가봐”

라고 이야기 하였고, 5분 지나고 또 5분 지나고 “나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친구가 “그냥 가 말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을 해줘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교무실로 가서 담임교사를 만나서 허락을 받으려고 “제가 선생님 추천 안 받아도 되니까 후보만 등록해도 되니까 허락만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담임교사는 “너 생기부에 스펙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이거는 학교의 얼굴인데 내가 어떻게 대표가 될 수 있어?”와 같은 말을 하여, 두 번째로 담임교사를 찾아 갔을 때는 울었고, 이후 담임교사에게 “제가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선생님이 보충수업 설문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걸었던 조건을 2학기 때 이행하면 되는 줄 알고 이행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의미였음) 담임교사는 오해를 했는지 “만약 됐어, 네가 사퇴하면 남는 애는 어떻게 해”, “이기적인 애”라고 말을 하였다.

- 이후, 4시 20분 정도 됐는데 ‘싸인 한 개 못 받았지만 그냥 내자’라고 생각하고 1층 인성인권부실로 달려가서 서류를 내면서, 인성인권부장 교사에게 “싸인을 하나 못받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못 나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자, 인성인권부장 교사는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하였고, 학생 옆에서 전화를 하면서 “아 그런 일 있었어? 지도 인정했고?” 등의 말을 하였다. 이후 인성인권부장 교사는 “이거(입후보 서류) 기간 늘려줄 테니까 담임하고 학부모하고 얘기하고 와라” 말하였다.

- 그 후에 마치 정신이 이상해진 것처럼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고 저녁밥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에게 이렇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춤을 추는 등 이상행동을 했다. 친구가 “엄마가 너 찾는다 내려가봐라”라고 해서 갔더니, 엄마가 “집에 가자”라고 해서 짐 챙겨서 집에 왔다.

- 학교를 자퇴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자퇴서류를 작성하는데 학교에서

자퇴 사유를 다시 적으라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자퇴 수속을 하는데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기다리게 하는 등 학교 측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구제신청을 했다.

## 2. 피해학생 자퇴관련 서류기록

가. 피해 학생 자퇴원 자퇴사유 기록(2017. 7. 4.)

○○○ 전교학생회장 선거 후보등록 과정에서 보충수업, 무단 결석과 출결조작 영어시간 자는 것, 화학시간 잔다는 것으로 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여고의 얼굴인 전교회장에 자격이 되지 못하다는 담임선생님의 반대와, 담임선생님과 한 말이 있고, 담임선생님 허락 있으면 해주겠다. ... (잘못듣고) ... 너는 퇴학감이다 ... (잘못듣고) ... 너는 퇴학감이다 ... 말씀하신 2학년 부장 선생님의 말씀으로 ○○○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갖고 두 분 선생님께서 인한 정신적 힘들음 호소하며 자퇴사유를 밝힙니다.

나. 피해 학생 즉시자퇴원 자퇴사유 기록(2017. 7. 11.)

학생회장 후보 등록 과정 중 ‘퇴학감’이라는 단어를 들을 정도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자퇴만을 막고자 했던 어머니께 한 선생님들의 행동과 자퇴과정 중의 선생님의 행동으로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잃음.



## [붙임 2]

### 피신청인들의 주장

#### 1. 피신청인 1.의 주장

위 학생은 2학년 학교 생활 중 보충수업에 무단으로 빠지고 출석부를 조작, 폐기, 은폐하는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자로 명백히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로 인해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학급에서의 행사 추천을 분명히 거부함을 반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2학년 1학기 학기말에 이르러 학생회장 출마를 희망하였으나, 최초로 추천서 마감 30분 전에 와서 추천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마감당일에 찾아와 써달라고 요구하는 자세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천서 작성을 거부하여 출마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어머니께서 내교(2017. 07. 03.)하여 '학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부적응, 의욕 및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상담을(15:30~17:20) 진행하였다. 어머니께서는 학생이 2차고사 기간에 병결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자퇴처리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

#### 2. 피신청인 2. 의 주장

2017. 6. 23.(금) 2-3 담임교사로부터 3반 학생들이 교과 방과후 수업에 무단으로 빠지고 출석부에 본인이 참여한 것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동

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본인에게 구두로 전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6. 26.부터 학급 자체적으로 자세한 진상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2017. 6. 26.(월) 1교시에 진상을 파악한 후, 사실로 들어나서 이와 관련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급 전체적으로 이를 목인하는 등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계도를 하기 위하여 학급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행동에 반성하는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2학기 전까지 학교 관련 각종 행사에 이번 일에 관련된 학생들은 추천 및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2017. 6. 28.(수) 상기 학생이 본인에게 와서 총학생회장 후보 추천을 요구하였으나, 자숙하는 기간 동안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에 추천을 해주겠다는 뜻을 표현했다.

담임교사가 6. 30.(금) 학생의 어머니께 유선으로 상황설명을 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해당 학생 학부모가 수긍하는 뜻을 보였다고 담임교사에게 내용을 전달받았다.

2017. 7. 3.(화)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로 담임교사를 찾아와서 15시30분 경부터 17시30분까지 상담을 하였으며, 상담과정에서 학생회장을 출마하지 못하는데 오는 스트레스 및 의욕과 사기 저하 등으로 7. 4.부터 7.까지 진행되는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니 병결을 요청하였고, 시험과 관련된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담당교사에게 정확히 알아보고 해당 사항을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을 학생의 어머니께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전달받았다.

[붙임 3]

○○○○고등학교 자치활동 관련 생활 규정

- 생활규정 제15조(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생활규정 제45조(선출·자격·임기) ① 본 회의 임원선출은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임원 선출은 7월 중 실시한다.

2. 총학생회장, 부회장, 학년장은 전교생이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각 부 부장과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장단(회장, 부회장, 학년장)이 선발하고,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4. 생활규정부원은 1학년을 대상으로 각 반에서 추천 또는 자원하여 학생회 임원이 선발하고,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5. 입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당선자 화정 등 선거에 관한 세부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본 회의 임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은 선거 공고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 생활규정부원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학교규정을 준수하는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생활규정 제52조(입후보자 등록)

① 정·부회장 등록 서류

1.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발부하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후보다 등록 기간 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별표 5. 양식서류)

가. 후보자 등록 원서(담임 추천서, 학부모 동의서)

나. 학년부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사와 재학생 100인 이상의 서명 추천을 받은 추천서(단, 재학생이 2인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자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 후보자 찬조연설자 1명 및 참관인 2명의 명단

라. 후보자 서약서

② 학년장 등록서류

1. 학년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발부하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별표 5 양식서류)

가. 후보자 등록원서 학년 장(담임추천서, 학부모 동의서, 학년부장 동의서)

나. 재학생 50인 이상의 서명 추천을 받은 추천서(단 재학생이 2인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자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 후보자 서약서

## [붙임 4]

### 관련법령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생략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